

전주시 항공대대 이전 밀어붙이기 반발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헬기소음 축소 의혹 제기

전주시가 지역민들의 반발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녹색운동연합과 군산비군기지피해상담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가 206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도동으로 확장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헬기 소음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항공대대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군의 헬기 전용작전 기지에 대한 헬기소음 법적 적용기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고 63.2㏈(WECPNL)로 예측돼 소음민원 기준치 75㏈(WECPNL)을 밟아 헬기 소음이 심각하다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

고 나섰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헬기 이착륙지점에서 소음도 측정을 하지 않아 헬기 소음도를 축소한 의혹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주시는 환경영향평가 기본법 소음 평균기준은 항공기 소음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헬기 소음도 측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헬기작전부대를 공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음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헬기는 이착륙 과정에서 소음이 가장 큰데 이착륙지점에서 소음 측정도 하지 않은채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 기준을 믿겠다는 자료를 근거로 주민들의 등의도 없이 항공대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소음도를 측정 결과를 재검토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대의 헬기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92.0dB(데시벨)을 기록하는 경우 소음도가 80.4~82.9dB, 500MD기종의 경우 74.4~78.8dB를 기록해 이륙평균 소음도는 80.0dB를 나타냈다.

또 헬기가 착륙하는 항로에서는 KUH 기종의 경우 소음도가 83.0~92.0dB, 500MD기종의 경우 79.6~80.3dB로 착륙평균 소음도는 85.0dB를 기록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도도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도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항공대대 소음도 측정 결과 특

히 이착륙항로에서 헬기 소음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가 이륙하는 항로에서 KUH 기종의 경우 소음도가 80.4~82.9dB, 500MD기종의 경우 74.4~78.8dB를 기록해 이륙평균 소음도는 80.0dB를 나타냈다.

또 헬기가 착륙하는 항로에서는 KUH 기종의 경우 소음도가 83.0~92.0dB, 500MD기종의 경우 79.6~80.3dB로 착륙평균 소음도는 85.0dB를 기록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도도동과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도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올해 농업예산 467억 원 투입

전주푸드 활성화 등 지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시는 대도시먹거리전략 10년 추진계획인 ‘전주푸드 2025플랜’ 실행 원년을 맞아 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생활권 직매장 및 복합형매장 개설과 전주푸드 연계형 시범 레스토랑 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밭대비 윤수개발 및 농로·농수로 확보 18억원, 기축 질병 제로화와 수요자 중심형 축산 활동사업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42억원 등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청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FTA 대응 시장개방과 농축산물의 가격하락 등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힘썼다”며 “농업이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시내버스 운행만족도 시민이 직접 평가한다

전주시, 상반기 150명 선정
모니터단 위촉 교육 실시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버스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매월 7회 이상 전주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시민 150명을 2016년 상반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모니터단은 이달 중 두 차례의 교육을 거쳐 오는 6월까지 5개월 동안 직접 전주시내버스에 탑승해 안전 운행, 운행실태, 친절도 차량관리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한 관찰 및 질의를 통한 운행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무정차와 급출발, 난폭운전, 불친절, 시설물 훼손 등 미흡사항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보하면 시정조치를 위해 해당회사에 통보된다. 반대로 친절기사를 발견할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친절사연을 추천·제보하면 향후 친절기사 선정에 반영되는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민모니터단의 활동 결과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승객만족도 평가 항목에 반영돼 5개 시내버스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6 상반기 전주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위촉 및 교육식

이는 통해 시는 그간 찾은 과정으로 인한 전주시내버스 이미지 개선과 불편사항 시정 등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실시한 공모를 통해 접수된 285명의 시민 중 150명을 상반기 시민모니터단으로 최종 선발했으며, 선정된 시민모니터단은 12일과 16일 이틀간 위촉식 및 교육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준강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은 시민이 직접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변화시킨다는 시망감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가 지난해 시민모니터단 활동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참여를 통해 안전운행 233건과 운행실태 364건, 친절도 102건, 차량관리 647건 등 총 1346건이 시정 조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추진

국비 등 11억 원 투입

전주시는 12일 대형유통업체의 위협으로 매출감소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중소마트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3년간 국비 8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11억원을 투입해 나들가게 육성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은 전주시가 주관하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시는 나들가게로 지정된 관내 236개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사업과 솜인숍, 건강관리(위생, 방재, 소방 등) 등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나들가게 제품판매 활성화를 위해 나들가게 상품 공동구매와 나들가게 점주 역량강화 교육, 골목상권 우수 지역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는 등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점포로 육성·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령 지역경제과장은 “SSM(기업수출파미카)의 물량공세로 골목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남자친구 체포한 경찰 폭행 20대 女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8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2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 협행범으로 체포되자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경찰을 폭행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려다 또 다른 경찰의 얼굴을 향해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2명에게 각 2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령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www.jjvs.or.kr *전자우편: jjvs@hanmail.net


